

기고

허기량 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장



불법 주·정차 근절, 나부터 실천하는 비움의 미덕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6월말 기준 2천344만대로 국민 2.2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용은 골목길 무분별하게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음식점 등의 상가 앞에 줄지어 주·정차된 차량들 간의 물피 접촉사고이다.

라도 최소한 차량 주·정차 시 연락처를 남겨 놓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주·정차는 삼가 해야 한다.

한의 보호 장치이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소방도로를 개설하면 그곳은 소방도로가 아닌 주차장으로 변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늦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社說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해야

재벌 3세의 마약 투약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재벌, 연예인 등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까지 마약에 손을 댔다 적발되는 일이 끊이지 않으며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가라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약 범죄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시내 한복판의 호텔에서 마약을 제조하던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농기계 사전정비 안전사고 예방해야

가을철 수확기가 시작됨에 따라 농기계 사용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가 끼이고 감기는 사고가 1610건(56.6%)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좁고 굽은 농로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보조자로 하여금 안전을 확인토록 하고, 농기계 정비는 작업 중이 아닌 작업 전후에 안전한 장소에서 시동을 정지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1인 시위는 무조건 보장인가?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1인 시위는 그렇다면 시위에 포함되는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관례에서는 1인시위는 시위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이 동시에 시위를 하는 경우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집회 시위로 본다

어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2009도 2821)이다. 두 번째 사례는 사전에 서로 연락없이 당일 다수인이 각자 1인 시위를 한 경우에도 피켓송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면 사전 모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일 공동의 목적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시법 위반이 인정된다는 판결이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fire, police, and emergency.

호남신문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Advertisement for '换位思考' (换位思考) featuring two women and text about understanding others' perspectives.